

**美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 국민권익위 방문해
“한인 참전용사 고충민원 해결” 감사 인사**

- 한인 참전용사 예우 법안 통과시킨 美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
전현희 위원장 만나 하원 결의안 전달 -

(2022. 10. 4., 국민권익위)

미국 조지아주 의회 상·하원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참전용사들의 고충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조지아주 에디 하비슨(Eddie Harbison) 상원의원과 빌 히친스(William Hitchens Jr) 하원의원을 만나 감사를 표하는 하원 결의안을 전달받았다.

두 의원은 조지아주에서 미국 최초로 외국 출신 참전용사들이 미국 참전용사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주역들이다. 현재도 미국 다른 주에서는 미군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했을 경우에만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베테랑’ 표식과 성조기를 새긴 참전용사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상을 “미군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한 자”에서 “미군의 동맹군으로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 참전한 자”까지 확대하는 법안(819호, 225호)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미국 최초로 한인들도 미국 참전용사들에게 주어지는 예우와 대형식품점 할인, 우대이율 적용 등 각종 보훈 혜택 일부를 받는 길이 열리게 됐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참전용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참전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 영문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또 규정상 본인이나 직계존비속만 신청이 가능해 대리인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없었다.

더욱이 40여 년 전 고국을 떠난 90세가량의 참전용사들에게는 국내에서 도와줄 친인척을 찾기도 어려웠고 영사관을 통할 경우에도 여러 소관부처를 거쳐야 해서 절차가 복잡했다.

수차례 시도 끝에 한인 참전용사들은 한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미국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들의 군 복무와 참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과거 행정기록이 수기로 작성돼 군 복무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았고, 오랜 세월이 지나 참전용사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 국가보훈처, 육군본부, 병무청, 경찰청 등의 협조로 군 복무 기록과 참전유공자 등록 자료를 통해 정확한 군번을 찾을 수 있었고, 총 5회에 걸쳐 47명의 영문 병적 증명서 발급을 지원했다.

결국 조지아주 한인 참전용사 47명은 ‘베테랑’ 표식과 성조기를 새긴 참전용사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참전용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월남전 참전용사 이찬필(Peter C Lee) 씨는 “재정적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직접 갈 수도 없고 도와줄 인연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로

부터 친절하게 참전기간이 수록된 영문 병적 증명서를 받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고국이 나를 기억하고 나의 잊혀진 참전 기록을 꺼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인장을 찍어 보내줬다. 국민권익위가 없었다면 생전에 얻을 수 없는 영광이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고국을 떠난 한인 참전용사들이 미국에서도 예우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신 두 분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빌 히친스 하원의원은 “나는 미국 해병으로 복무하며 베트남전에 참전한 참전용사로서, 한인 참전용사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를 전장에서 직접 지켜보았다. 한인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릴 수 있도록 도와준 국민권익위와 한국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사진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 조사에 참여한 조사관, 참전용사 가족들과 기념사진 찍는 모습



〈사진2〉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장이 에드 하비슨 상원의원(좌), 빌 히친스 하원의원(우)과 감사결의안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 원문

A RESOLUTION

Recognizing and commending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for other purposes.

WHEREAS, members of the early Korean American community served with distinction in the Allied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during World War I, World War II, the Korean War, and the Vietnam War; and

WHEREA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HB 819 on August 4, 2020, which was unanimously passed by the Georgia State Senate, approximately 150 veterans have obtained the veteran mark and engraved American flag on their driver's licenses; and

WHEREAS, on July 1, 2021, SB 225 entered into force following legal review, and since then, more than 120 veterans have been allowed to ride on Georgia's roads with specially designed vehicle license plates denoting their service; and

WHEREAS, these two Georgia bills are the State of Georgia's first legislative amendments to be petitioned and facilitated by Korean Americans, including the dedication of Georgia's Vietnam War and Korean War veterans; and

WHEREAS, in order to be honored under these bills, proof of participation as an allied force of the United States was required, and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oof was replaced with an English 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 and

WHEREAS, due to this requirement, many veterans were left with no way to obtain an English 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 and could not be properly honored, prompting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ct on behalf of these veterans; and

WHEREAS, in cooperation with the Marine Corps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Republic of Korea Headquarters of Army, Naval, Air Force respectively, and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he commission was able to provide veterans in need with the necessary documentation; and

WHEREAS, it is abundantly fitting and proper that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ppropriately honored for its dedication on behalf of Korean-American allied veterans.

NOW, THEREFORE, BE IT RESOLVED that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recognized and commended for its many outstanding contributions on behalf of Korean-American veterans and extended best wishes for future success.

So resolved, this _____ day of _____, 2022.

Representative Bill Hitchens
District 161
Georgia House of Representatives

□ 국문 번역본

결 의 안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로를 인정하고 기리는 바입니다.

초기 한인 사회의 구성원들은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한국 전쟁 및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2020년 8월 4일 조지아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HB 819 시행 이후, 약 150명의 참전용사는 운전면허증에 베테랑 표식과 성조기를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에 SB 225가 법적 검토를 거쳐 발효된 이후, 약 120명 이상의 참전용사들은 베테랑임을 나타내는 특별 제작된 차량 번호판을 달고 조지아주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법안은 한인들의 청원과 추진으로 발효된 조지아주 최초의 입법 개정안으로, 베트남전 참전용사와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맹군으로 참전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했고, 대한민국의 경우 영문 병적 증명서가 이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건으로 인해 영문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많은 참전용사가 적절한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전용사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경찰청, 육군본부 등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참전용사들에게 필요한 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한인 동맹국 참전용사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합당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한인 참전용사를 위한 뛰어난 공로를 인정하고 기리는 것을 결의하며 앞으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022년

빌 히친스 161지구 하원의원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운영,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인도네시아와 공유

- 21일 인도네시아 국가행정관료개혁부 차관, 내무부 정보센터장 등
대표단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

(2022. 9. 21., 국민권익위)

대표적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 운영 경험과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를 인도네시아 고위공직자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디아 나탈리사(Diah Natalisa) 인도네시아 국가행정관료개혁부(이하 행정개혁부) 공공서비스 차관 등 대표단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운영 및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한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공공서비스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개혁부 차관을 포함해 내무부 정보센터장, 옴부즈만 위원, 발리 주 감사관 등 인도네시아 행정서비스 관련 부처 고위공직자들이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국민신문고와 고충민원 처리에 특별히 관심이 높았다. 이는 2019년 개발협력사업(ODA)으로 기존 민원시스템(LAPOR)과 각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민원신고 시스템을 통합한 국민 통합민원시스템(SP4N-LAPOR)을 구축·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 인도네시아 통합민원시스템 운영 및 정보기술(IT) 관리 실무자 20인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정책설명회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모든 정부 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국민소통창구로 국제사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각 기관이 해결하지 못한 고충민원을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디아 나탈리사 행정개혁부 차관은 “한국은 짧은 기간에 많은 개혁을 이룬 국가이고 국민권익위도 그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국민신문고와 같이 국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구축시스템 운영을 위해 배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안성욱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국민신문고 운영 경험과 고충민원 처리 사례가 인도네시아의 공공행정 시스템 운영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개발도상국에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청렴포털’ 구축·운영 지원 추진”

- 유엔개발계획(UNDP)과 협력대상국 선정 위해
21일 13개국 관계자 대상 온라인 협력회의 개최 -

(2022. 9. 22.,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구축과 운영 경험 등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 위한 ‘청렴포털 공유사업’ 협력대상국 선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청렴포털’ 공유사업 참가를 신청한 13개 개발도상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협력대상국 선정을 위한 온라인 협력회의를 21일 개최했다.

‘청렴포털’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이다.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6월 ‘디지털 기술 기반 반부패 시스템 공유사업’에 관심있는 30개 개발도상국 관계자 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이후 우리나라의 ‘청렴포털’ 운영 및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13개국이 사업 참가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최종 사업대상국 2곳을 선정하기 위해 지원국 관계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후 각국의 특수성과 사업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은 26일 협력대상국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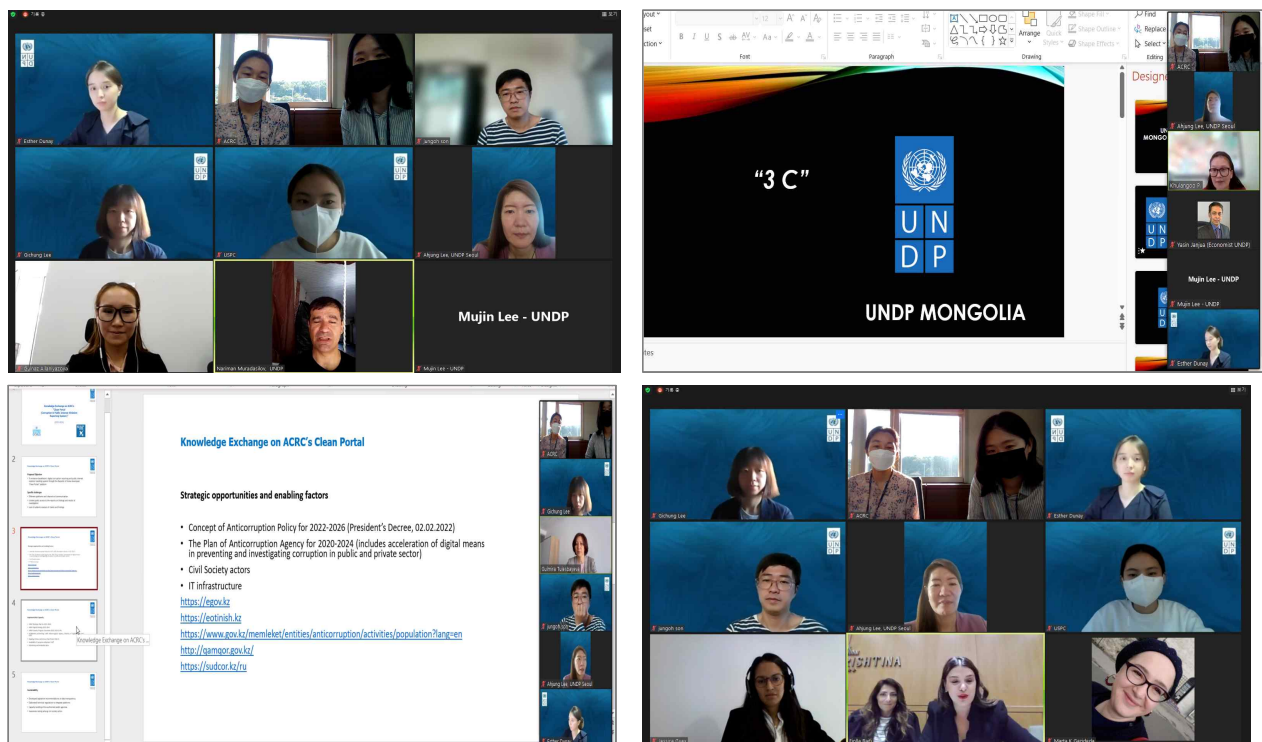
정이다. 협력대상국은 향후 2년간 각국의 상황에 맞는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협력대상국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험을 지원하고 유엔개발계획은 기관 간 의사소통과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맡는다.

특히 대상국의 제도 및 시스템 비교분석, 사업담당자 집중연수 실시, 대상국 외 타 국가도 참고할 수 있는 ‘청렴포털 분석 영문 자료’ 등을 통해 기술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청렴포털’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최종 협력대상국의 성공적인 디지털 반부패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청렴포털 구축 및 운영 경험이 대상국 외에 여러 국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국제사회와 한국의 반부패 제도 발전 경험 등 공유

- 2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반부패 온라인 토론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제도 소개 -

(2022. 9. 26., 국민권익위)

국제사회에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제도를 소개하고 반부패 제도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오후 4시 제2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반부패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 발전 내용을 발표했다.

‘타슈켄트 반부패 포럼’은 부패척결 및 예방에 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이번 토론회에는 세계은행·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국제기구, 미국 마약단속국·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 등 각국의 정부 부처 및 국제 반부패아카데미(IACA) 등 전세계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회 주제는 1)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으로서의 개방성과 투명성 확보, 2) 효과적인 부패 위험성 평가체계 구축, 3) 반부패 교육 및 의식 개선 총 3가지로 각 주제별로 참여자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의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첫 번째 발표 주제인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으로서 개방성 및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 한국의 반부패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2002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이후,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그리고 최근 2020년 공공재정환수법 및

20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반부패 제도 발전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 한국의 앞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반부패 투명성 제고 정책을 공유했다.

* 청렴포털(Clean Portal):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인 부패측정 모범사례집에서 한국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통합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반부패 정책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슈켄트 포럼 회의장 모습>



<회의 포스터>



<인사말씀>



<세션 I 사회자>
한스 올리히 아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우즈베키스탄
지부장 대행



< 세션 I 발표자 ① >
자쿰길 시리노프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위원장



< 세션 I 발표자 ② >
국민권익위 원영재 국제교류담당관



< 세션 I 발표자 ③ >
제미슨 헤닝거
Open Data Watch 프로젝트 매니저



< 세션 I 발표자 ④ >
나짐 라자보브
아제르바이잔 검찰청 반부패과장



< 세션 I 발표자 ⑤ >
고란 클레메키치
슬로베니아 지역기반 NGO 'Regional
Dialogue(지역담화)' 법률전문가



< 세션 I 발표자 ⑥ >
뮌로드 쿠사노브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경제·환경사무소
프로젝트 책임자



국민권익위, 민선8기 지방정부와 청렴·공정 정책 추진방향 직접 소통

- 14일 및 16일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회의 개최 -

(2022. 9. 14., 국민권익위)

청렴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렴·공정 정책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초기에 지방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청렴·공정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14일과 16일에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4일에 17개 광역자치단체, 16일에 226개 기초자치단체 감사관 등이 참여했다.

회의는 올해 하반기 반부패 법령·제도 중점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운영 관련 건의사항 등 지방현장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되었다.

반부패 법령·제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의 반부패 행위규범과 공공재정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하반기 점검사항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집중점검과 법정 청렴교육 이수 관리 강화 내용 ▲부패·공익 신고 관리와 신고자 비밀 보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관련 변화된 내용 등을 공유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선, 규모와 영향력이 큰 광역자치단체의 청렴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회의(14일)에서 청렴컨설팅* 제도의 개요와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적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현황을 진단하고, 전문가, 국민권익위, 멘토기관(청렴도 우수기관)이 종합적인 맞춤형 대안을 제시

기초자치단체 대상 회의(16일)에서는 올해부터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한 설명과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올해부터 기존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중심의 ‘청렴도 측정’과 기관별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하는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은 기존에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아 사실상 첫 종합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방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 추진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다. 회의 개최 전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 당일에 나온 의견 중 정책에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등 환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성욱 사무처장은 “그간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향상에 국민들과 직접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치단체 공직자들의 헌신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청렴도 향상과 청렴선진국으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